



‘사회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김동춘

세월호 이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작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한국의 국가, 정치, 사회의 맨얼굴을 그대로 드러내준 계기였다. 300여 명의 학생과 승객이 침몰하는 배와 함께 죽어갈 때, 유족들이 울부짖고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았으나, 한 사람의 승객도 추가로 구조되지 못했다. 침몰 자체는 이명박 정권 이래 계속된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정치권, 관료 집단이 연루된 부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조의 실패는 가장 일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 그리고 더 심층적으로는 한국의 기업, 노동, 교육, 종교, 시민사회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왜 이들이 구조되지 못했는지, 어떻게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된 것도, 해결된 것도 없다.

모든 국민은 세월호 이후 거의 매일 ‘국가 부재’, ‘정치 부재’, 그리고 ‘사회 붕괴’를 잔인한 방식으로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한걸음 물러서서 보면 한국의 많은 사건과 사고, 그리고 정치나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일들도 사실은 국가의 기능 부재, 좀더 정확히 말하면 ‘국민주권의 상실’ 상태와 연관된 것들이다. 한국이 8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자살공화국이고 만연한 산업 안전 사고도 사건 자체로만 보면 극히 개인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나 사회의 잘못에 기인한 명백한 ‘사회적 살인’이다. 군 내에서의 구타, 자살, 탈영병의 총기 사고가 바로 일상에서의 국가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대미관계에서의 전시작전권 회수 포기, 대북 적대주의의 고집, 대일관계에서의 정책과 노선 부재는 거시적인 차원의 국가부재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억압권력으로서 국가는 존재하나, 소프트웨어 즉 국민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그들의 아픔과 욕구를 실현시켜주는 보호기구로서 국가가 있는지 회의적이다. 힘없고 돈 없는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사실상 버려진 존재이고, 너무나 흔해빠진 그들의 고통과 죽음들은 비가시화된다. ‘영혼 없는 노동,’¹⁾ 빈곤과 차별 속에 매일을 버티는 다수의 한국인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다.²⁾

한국은 지금 거의 모든 면에서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신뢰의 붕괴가 가장 치명적이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해서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선망의 대상이던 한국이, 극심한 빈부격차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후퇴, 경제성장의 지체,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별다른 발언권도 갖지 못한 삼류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품위 있는 국가를 세우는 데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고통이 수반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몇 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잘 보여주고 있다. 자조, 비탄, 절망, 적나라한 이기주의와 거짓말, 속임수가 권력 최상부에서 저 바닥 사람들의 일상까지 매일 나타난다. 일차적 책임은 정치집단에 있고, 그 다음은 사법, 검찰, 거대 언론에 있다. 그러나 그들을 밀어주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에게 저

1) “영혼 없는 노동을 하면 삶은 질식되어 죽어간다”는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지적.

2) 박근혜 정부하 한국 시민들의 삶은 2008년 위기 때보다 못한 10년 이래 최악의 상태에 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30105512670>



항하지 않는 국민들, 특히 침묵하는 엘리트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결국 굴절된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의 결손, 자본주의 질서에 취약한 윤리적 기반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으며, 시민사회의 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압축적인 성장은 가능하지만, 역사의 비약은 없다. 서유럽 몇 나라의 수백만 인민들이 수세기 동안 피흘려 얻어낸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우리는 단 몇 십 년의 투쟁으로 쉽게 쟁취할 수는 없다는 교훈을 얻는다. 지난 10년 간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험은 한 세기의 뒤늦어진 근대화의 역사를 뒤집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다. 민주화되었다던 국가가 하루아침에 권위주의로 전락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빈곤한 대중들이 자신들을 더욱 빈곤하고 비참하게 만들 세력들을 자신의 구원자인 줄 착각하고 믿고 따를 때는 반드시 그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드는 교육이 있는 법이다.

그렇다면 세월호 사건을 통해 완전히 드러난 한국사회의 맨 얼굴, 오늘 한국사회가 서 있는 위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어떤 정치사회 개혁의 대안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한국의 국가와 자본주의 : 냉전/분단 속의 기업국가³⁾

1) 한국 자본주의의 현재성contemporality: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1989년 소련, 동구 사회주의 붕괴로 냉전체제는 끝났고 세계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에는 부분적으로만 맞는 이야기다. 동아시아의 근현대사에 대해

3)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기업사회, 기업국가corporate state란 미국의 가토 연구소Cato Institute가 골격을 만들고 지난 대통령 부시George Bush 2가 제창한 소유자 사회ownership society와 유사한 개념이다. 소유자 사회라는 것은 의료보험, 사회보장에서 자기 자신의 소유자로서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데, 정책으로 표현될 경우, 기업에 대한 감세조치, 상속 제한, 의료보험의 개인 선택권, 교육에서 부모의 결정권 중시, 퇴직 후 설계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정책을 지향한다.

무지한 유럽 중심주의 시각을 갖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한국 사회도 1989년 이후 세계의 다른 나라처럼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현재성의 규정 아래 있다. 그러나 한국이 걸어온 역사적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통시적인 것과 공시적인 것이 한국의 정치경제 현실 속에서 하나의 총체로서 얽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자본주의, 한국사회를 봐야 한다.

우선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재성은 세계적 신자유주의 질서다. 신자유주의는 지금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거의 예외 없이 관철되고 있다. 그것은 국가가 '자유'의 이름으로 시장주의를 강제하는 것이며, 사유화(민영화),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 억압 등의 정책으로 나타난다. 국가는 법 집행, 시장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노동자나 약자들의 저항을 통제하고 규율하는 '치안국가'로서의 성격은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 한편 생산의 서비스화, 탈국가화, 그리고 지구적 소비주의 문화와 맞물려 사회적 연대는 해체되고, 불평등과 빈곤은 더 커지고 있다. 즉 생산체제의 성격변화와 탈영토화 현상 때문에 저성장이 만성화되고 있으며, 국가 간 격차보다는 국가 내의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다. 이 질서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불평등과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개인화, 파편화로 인해 집단적 저항의 가능성은 더 희박해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지구적 금융자본의 지배,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저성장, 자본의 이윤실현 기회의 축소는 2008년 금융위기를 폭발시켰으나 미국을 필두로 한 국가 개입으로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유럽 발 경제위기가 상존하고 있고, 만성적인 저성장 체제가 극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러한 세계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저성장은 과잉자본화 및 중산층의 소비능력 저하 및 지구적인 불평등에 의해 초래된 것이기도 하다.⁴⁾

4) Wolfgang Streeck, "How Will Capitalism end", *New Left Review*, May-June 2014.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탈산업화, 생산의 서비스화, 즉 소비자본주의와 맞물려 있다. 소비자본주의와 고객 중심주의는 조직 노동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 노동자를 감정 노동자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하에서는 분노의 표출과 집합적 저항은 억제되고 우울증과 자살이 가장 흔한 사회 현상이 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사용자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 그리고 소비자에 의해 압박을 느끼고 있다.⁵⁾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극단으로 가면 탈자본주의, 탈근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습 자본주의, 준 신분사회가 도래한다는 사실도 새롭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여러 나라는 사실상 새로운 과두제 사회, 새 귀족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민주주의는 거의 허울로 전락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오직 덜 자본주의일 경우에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로 과도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는 자본주의를 위협한다.⁶⁾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책임성과 사회적 동원과 응집성을 해체시킴으로써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한 근대 국민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특히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라는 적이 없어지면 민주주의와의 동거 혹은 타협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법치의 원칙도 벗어던지려 하고 있다. 결국 제도 정치에서 대표되지 못하는 인민들은 선거에 더 참여하지 않게 되어 각 나라에서 투표 참가율은 저하되고 있다. 게다가 각국의 재정위기로 국가의 하부구조가 취약해지고 국가의 보호 기능이 후퇴하자 조직노동은 물론 사회의 주변 세력들은 더욱더 탈정치화되었으며, 제도권 정당의 대표성이 흔들리게 되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를 편향적으로 해석한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논리는 시장의 논리를 도덕의 차원까지 격상시켰으며, 가난

은 단순히 부끄러운 현실이 아니라 처벌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⁷⁾ 이 점에서 본다면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지배를 가장 노골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이지만, 시장의 실패자, 탈락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탈계급적인 방식, 즉 고립된 개인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급 없는 계급 사회', 혹은 '비대칭적인 계급구조화'라 부를 수도 있다.⁸⁾ 그래서 약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대의제 민주주의와 근대 국민국가는 현저하게 그 통합성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국가 내 국민은 주권을 누리는 소수의 주류 세력과 국가 밖으로 버려진 존재인 '잉여'로 구분되었다.

권력과 자본의 세습, 잉여 노동자의 신 노예화 현상은 세계화 국면에서 국민국가의 역할 축소·포기와 맞물려 있으며, 이는 패권국가인 미국 및 미국 자본주의의 도덕적 위기를 수반한다. 미국의 도덕적 지도력 상실은 9·11 테러이후 지구적 테러리즘이 등장한 원인이며, 1948년 미국과 영국이 합작한 이스라엘 건국 이후 지금까지 계속된 중동지역의 만성적 전쟁 상태의 원인이기도 하다. 미국이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불처벌impunity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 이후 남미나 아시아의 독재자들과 손을 잡고 국가이익과 자본주의 패권을 도모하였듯이, 탈냉전 이후 '테러'의 만연은 이러한 미국의 불처벌 관행과 패권주의의 역풍이라고 볼 수 있다. 패권국가인 미국의 도덕 헤게모니 결핍은 오늘날 모든 국민국가와 국민국가 내 지도부의 도덕적 무규범 상태를 불러온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곧 신보수주의, 즉 테러리즘, 극우 인종주의, 반유대주의의 시대이기도 하다. 세계 곳곳에서 국지적인 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퇴영적인 민족주의와 인종주의가 활개를 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의 우익 테러, 영국 대도시에서의 이주 청년들의 폭동, 일본에서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혐오 열풍 등 국제적인 현상은 물론, 세월호 유족들을 비

7) 로이 바강, 「처벌대상으로서 가난」, 『가난을 엄벌하다』, 시사인북, 2010 참조.

8) 김동춘, 「'민주화' 이후의 지구화 국면에서 한국의 계급구조화 비대칭적 '계급구조화'」, 조희연·김동춘·오유석 외, 『한국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 사회경제적 독립의 변형 연구』, 한울, 2009.

5) 정하나, 「한국 금융산업의 감정노동화 경향과 그 실태-은행 텔러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비정부기구학 석사학위논문, 2013.

6) Streeck, 앞의 글.



웃은 일베와 극우세력들의 맞불 ‘폭식 투쟁’, 테러집단이었던 서북청년단의 부활 등 국내 현상 역시 신자유주의의 도덕적 타락의 한 징후이며, 그 근저에는 경쟁의 대열에서 탈락해서 좌절한 청년들과 소수자들의 분노가 깔려 있다.

2) 한국 국가, 정치구도, 자본주의의 역사성 : 냉전/분단의 규정성

그러면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현재적 규정성은 어떻게 한국과 동아시아의 역사적 규정성과 결합되어 오늘의 한국사회를 구성하고 있을까?

한국은 1945년 일제의 패망 이후 세계적 차원의 냉전적 대립의 전선에 서게 되어 통일된 국가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미국에 의존하는 반(半)주권 상태의 분단국가가 수립되었고, 곧바로 3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한국전쟁을 겪었다. 그래서 일제 식민지 지배 질서는 청산되지 않은 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외피 속에서 온존하였다. 1953년 휴전 이후 남한과 북한은 서로 적대하는 준전쟁국가로 고착화되었다. 전쟁과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국가, 즉 적에 대한 폭력행사를 준비하는 국가는 내부의 적에 대해서도 설득보다는 배제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래서 국민주권의 원칙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 불구 상태에 놓인다. 나는 이것을 ‘반(半)의 반(半)의 주권상태라 부른다. E. E. 샤프슈나이더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하지만 정당의 대표적 부재로 ‘절반의 인민주권’ 밖에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는데,⁹⁾ 냉전적 분단/전쟁 상태에 있는 한국은 사회주의는 물론 민족주의 세력까지 배제하기 때문에 미국 정도의 인민주권의 실현도 어려우므로 반의 반의 주권상태에 있다고 본다.

필자가 ‘전쟁정치’라고 표현한 한국의 지배/권력 양상은 백낙청 교수가 주장하는 분단체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지만,¹⁰⁾ ‘전쟁정치’라는 규정은 그냥 분단이 아니라 적대적 분단이 국내 정치에 연장되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분단/휴전의 내재화로서 한국의 정치사회, 그리고 권력관계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필자가 강조하는 전쟁정치는,

“교전 상황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내부 반체제세력의 도전을 이유로 국내 정치가 전쟁 수행의 모델이나 원리에 입각해서 진행될 때, 정치·사회 갈등이 폭력화되거나 지배질서 유지를 위해 적과 우리의 원칙과 담론이 사용되어 적으로 지목된 집단의 존재와 활동의 기반을 완전히 없애려 할 때, 국가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 정당 간의 갈등이 비정규 전쟁과 갈등 양상으로 벌어지게 된다. 이 경우 내전과 치열한 정치 갈등은 거의 구별할 수 없고, 사회 전 영역이나 집단에 전쟁의 논리가 일반화된다. 국가 내부의 노동·빈민세력, 비판적 지식인까지도 내전 중의 절대적 적처럼 취급되고, 이들을 제압하여 무력화하는 일이 국가의 일차적 목표로 거론된다(…) 전쟁정치는 이데올로기 차원, 법적 차원, 공권력의 행사 방식 등 다차원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권력의 행사는 광범위한 폭력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다.”¹¹⁾

1987년 ‘민중화’ 이후에도 국정원, 기무사, 공안검찰 등 공안기구가 건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 여전히 개입하는 이유, 국가보안법이 건재하고,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여전히 제한되는 이유는 바로 이 전쟁정치에서 기인한다. 이런 조건에서 집권 여당은 국가, 민족,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의미의 통상적인 보수세력이 아니며, 그에 맞서서 형성된 제1야당도 평등, 복지, 정의를 지향하는 ‘진보’ 세력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한국의 집권 여당은 스스로 우익이라고 자처하고 있으며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개인을 좌익으로 몰아부친다. 이러한 냉전의 정점에 있던 시기에 사용되던 사고방식과 담론인 ‘적과 나’의 대립구도를 집권세력이 설정한 이상 정당 간의 정치적 타협과 대화는 매우 어렵다.

한국에서 제도권의 여야 구도 밖에서 진보정당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9) E. E. 샤프슈나이더, 『절반의 인민주권』, 후마니타스, 2008.

10) 김동춘, 『전쟁정치 - 한국정치의 메카니즘과 국가폭력』, 도서출판 길, 2013.

11) 김동춘, 앞의 책, 140쪽.



계속 좌절되고 보수 양당 구도가 고착된 이유도 바로 이 전쟁정치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분단/준전쟁체제 하에서 야당 및 일체의 저항세력의 이데올로기적·물적·사회적 기반은 체계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일당독재 체제가 지난 70여 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일본 하토야마 정권, 즉 자민당 일당독재를 끝내려는 민주당의 실험이 실패한 이유, 대만 민진당의 실험이 좌초한 것도 한국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45년 직후 국가 형성기에 미국이 동아시아 반공국가 수립을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동아시아의 모든 극우정당을 공식·비공식 지원했던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의 양당구조는 영국의 보수/노동의 대립보다는 공화/민주의 미국과 더 유사한데, 조직노동세력이 정치적으로 전혀 대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과 한국에서는 계급정치가 억압되고 차단된 상태에서 정치적 스펙트럼은 보수 대 자유주의 구도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두 보수정당이 제3당의 진입을 막고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 미국의 민주당 역시 조직노동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배세력의 이해를 침해할 수 있는 정책, 전쟁이나 패권주의 외교노선을 비판할 수 있는 노선을 펴지 못한다.¹²⁾ 한국에서 집권 여당은 이데올로기(반공, 반북, 친자본)에서 언제나 공세적인 위치에 있고, 법과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경제 및 사회 차원에서도 대기업, 주류 언론, 우익단체, 기독교 세력의 힘을 입고 있으나, 야당은 호남의 지역주의 정서 외에는 어떤 사회 세력으로부터도 확고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집권 여당은 보수정당이 아니라 ‘국가 정당’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정원, 검찰, 법원, 주류 언론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정치’의 지원 위에서 활동한다. 그리고 이들 국가, 언론기관은 지난

대선에서 볼 수 있었듯이 국가, 애국의 이름으로 여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도 제대로 견제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 한국을 비롯하여 국가주의 전통을 가진 동아시아 여러 나라는 형식적으로는 양당 체제라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1.5당의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다. 동아시아의 정당 체계는 국가 정당 대 반대당의 이원구조로 되어 있으며 반대당의 집권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고, 실사 집권하더라도 사면초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제1야당은 진보정당이 제도화될 수 없는 국가의 억압성과 선거제도 등 장벽에 가로막혀 정권 반대의 여론을 흡수하는 수동적, 반사적 기능 정도만 수행하면서 체제의 한 구성인자로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원내 10석을 차지하며 이러한 양당 독점 구조가 약간 균열될 가능성이 보였으나 민노당의 분당과 좌초로 인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갔다. 제1야당의 독점적 지위는 대통령제, 단순 다수제, 소선거구제 등에 의해 변화의 압박을 받지 않고서도 지속되고 있다. 즉 야당은 정책정당으로 변신해야 할 유인도 별로 없고, 혁신을 해야 할 압박도 미약하다. 오직 호남의 지역기반과 보수세력의 실정에 기대어 반사 이익만으로 총선에서 득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살이 정당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 전쟁정치하에서 정치구도의 굴절은 단순히 지배구조의 특징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성격도 규정한다. 이 점에서 필자는 한국 자본주의를 ‘냉전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싶다. 냉전자본주의의 특징은 소유권 절대주의, 구조적 반(反)노동, 재벌체제, 그리고 가족신뢰체제다. 흔히 냉전체제 하에서 서방 여러 나라는 사회주의라는 적의 위협과 내부의 조직노동 세력의 저항을 끌어안기 위한 일종의 ‘수동 혹은 예방’ 조치로서 복지체제를 도입했다는 설명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서유럽과 달리 보수세력에게 그러한 양보와 타협을 강제할 조직노동의 힘이 취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시장자본주의가 도입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즉 준전쟁상황이 복지정책 도입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 전쟁상황이 오히려

12) 오바마가 재집권은 성공했지만, 급격히 지지도가 하락하여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것도 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오바마는 부시의 대외정책과 신자유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지지층인 중하층, 노동자들을 이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극단적 반복지로 나아가게 만들었다.¹³⁾ 특히 한국의 노동·복지 체제는 국가폭력과 '강요된 제1세계주의'¹⁴⁾에 의해 더욱 강한 시장만능주의, 가족주의, 개인책임주의 양상을 지니고 있다.¹⁵⁾

1989년 이후 유럽에서의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는 여전히 냉전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 개방, 러시아와 미국의 충돌로 신냉전 기류가 형성되고 있으며 그것이 한반도의 분단을 이중적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1987년 이후 '민주화'의 반격을 맞은 과거의 반공주의가 종북 이데올로기로 부활하였고, 국정원 등 수사정보기관이 스스로를 재정비하여 또다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일제 식민주의 체제가 냉전, 분단으로 변형, 지속되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 정당의 국민적 대표성,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불구 상태에 있는 한편, 반공자유주의라는 정치 자본은 오늘날에 와서는 재벌 개혁, 증세, 복지 확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 등 경제사회의 민주화를 좌절시키는 조건이 되고 있다. 즉 과거의 국가폭력은 이제 시장의 폭력으로 재연 지속되고 있다.¹⁶⁾

3) 한국 자본주의의 통시성Diachronicity과 공시성Synchronicity - 동아시아형 주변부 신자유주의¹⁷⁾

- 13) 김동춘, 「분단, 전쟁체제 하에서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참여사회연구소,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 이매진, 2013 참조.
- 14) 한국은 미국의 대소 전진기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 이후부터 '자유'의 이데올로기적 지배에 의해 제3세계로서의 정체성이나 자의식이 싹틀 수 없었다. 이미 국제적으로 '더러운 전쟁'으로 공인된 베트남전쟁에서 한국인들이 그 많은 피를 흘리고도 이 배경과 이유에 대해 집단적으로 무지한 것도 여기에서 연유하고 있다.
- 15) 김동춘, 「노동·복지체제로 본 한국자본주의의 성격」,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 도서출판 길, 2006.
- 16) '매맞는 텔레마케터'는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식 신자유주의 혹은 기업국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http://tvpot.daum.net/v/vd027aUaZZvLU99vVLIUyiF>). 기업이 강요하는 성과와 실적의 극단은 폭력이다. 그것은 해고라는 시장의 폭력만이 아니라 신체를 굴종시키는 물리적 폭력이다. 법은 확실히 폭력을 행사하는 관리자나 경영자의 편에 서 있다. 노동자들의 생존의 필요는 노예상태를 감수하도록 만든다. 문명국의 19세기에 일어난 일이 한국에서는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각 나라의 역사적 발전 경로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며 각 나라의 조건에 맞게 변형된다. 역사적 경로로 보자면 보수 반동 세력의 쿠데타에 의해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경우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 의해 수립된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한 경우로 구분해볼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개발독재체제가 자유민주주의의 합리적 시장 체제로 변형되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로 변형된 경우와 어느 정도 개입주의 복지국가의 틀을 갖춘 다음에 그것의 해체 혹은 약화를 경험하는 나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즉 국가의 하부구조적 힘, 특히 재정능력 여부와 법치 등 국가 중립성, 권력 행사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에 따라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 시행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지금의 신자유주의를 유형론적으로 보자면 복지국가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중·북유럽 국가의 중심부 신자유주의와 노동세력의 도전을 맞은 개발독재국가의 구보수세력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도입한 주변부 신자유주의로 구분해볼 수 있다. 중북부 유럽국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민주화, 법의 지배, 사회적 안전망과 사회통합, 노동조합 운동의 제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의 경로를 겪게 되었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독일의 메르켈처럼 서유럽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옹호하는 우파 정권이 탄생하고 또 재집권에도 성공했는데, 우파 정권이 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탈규제, 복지해체 정책을 밀어붙이지는 못했다. 주변부 신자유주의는 1973년의 아옌데 정권을 붕괴시킨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이나 1980년 광주학살 이후 집권한 전두환 정권처럼 쿠데타 등의 방식으로 도입된다. 이 경우 자유시장의 원칙은 국가폭력, 노동 억압 등 과시즘 혹은 권위주의와 공존한다. 다만,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냉전 반공체제와 충돌없이 진행되었다.¹⁸⁾

신자유주의는 단순한 자유경쟁, 시장 논리의 확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속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적 독점의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17) 김동춘, 「한국형 신자유주의와 기업국가로의 변화」, 『황해문화』, 2010 봄호.



조치와 같은 국가의 노사관계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노조연대의 해체, 은행 국영기업 사영화를 통한 사적 자본의 해체모니 강화 등으로 나타난다. 즉 국가는 대기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노동자의 조직화와 연대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극히 비중립적·비대칭적으로 개입한다. 그런데 주변부 신자유주의 경우 국가는 사적 이익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양상을 띤다. 그 극단적인 형태로는 국가가 범죄 집단과 결탁한 ‘마피아 자본주의’다. 즉 국가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나라에서 국가는 중립성의 외양을 지니면서 자본 축적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지만 국가가 아예 그런 중립성과 공정성의 외양조차 견지하지 못할 경우 경찰·관료·사법부 등 국가기관이 마피아 자본과 직접 결탁하여 사적 이익의 노골적인 옹호자가 된다. 러시아의 7대 과두권력, 헝가리나 멕시코의 마피아 국가적 속성이 그 예이다. 한국은 이런 나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재벌의 시장독점, 재벌의 가족지배구조와 법 집행의 자본편향성, 기업의 사설폭력에 대한 국가기관의 묵인 혹은 공조 작업이 ‘재산권 보장’, ‘자유 시장’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는 점에서 주변부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보여준다.¹⁹⁾

결국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축소가 아니라 자본과 국가 간 새로운 관계의 수립을 의미한다. 주변부 신자유주의 국가가 대개 그러하듯이 한국의 경우는 크게 보아 초기 국가 건설 과정에서 민간에서도 축적된 자본이 거의 없었고, 국가도 금융과 조세를 통해 경제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할 자본을 확보할 능력이 거의 없었다. 당연히 재분배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오히려 사기업과 가족이 금융·의료·교육·복지 등의 재생산 영역을 주로 담당하였는데,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 즉 작은 국가, 탈규제, 공기업 민영화의 분위기 속에서 그 경향이 더욱

18) 이러한 구분은 애초 하비가 시도한 것이었다. 데이비드 하비,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한울, 2007, 50쪽. 와다나베 오사무는 일본은 양자의 양상이 결합되는 동아시아형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渡辺治, “日本の新自由主義: Harvy의新自由主義に寄せて”, David Harvey, 三田成也 外 編譯, 『新自由主義: その歴史的展開と現在』, 作品社, 2007, ハウ.

19) 데이비드 하비, 앞의 책, 50쪽.

노골화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입법부나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 까지도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면서 자본 축적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런데 동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제국주의/식민지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미국/유럽이 주도한 냉전질서에 수동적으로 편입되었다. 즉 파시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전후 민주화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과거의 극우세력이 여전히 지배세력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동아시아형 주변부 신자유주의에서 국가의 억압적 힘은 강대했으나 재분배 기능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국가의 하부구조인 재정능력과 공공성publicity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자본, 군부, 국가관료 등이 유착하여 시장경제를 발전시켜왔다. 관료집단 즉 국가엘리트의 리더십과 윤리의식이 낮으며, 사법부나 검찰이 중립적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한다. 또한 이들 나라의 국가 엘리트는 사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가 공공과 정의의 원칙에서 있지 않고 사익 집단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 그래서 국민들은 엘리트들을 지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필자가 『전쟁과 사회』에서 말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논리가 작동하는 피난사회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 특히 한국전쟁, 1997년 IMF 위기 등 국가 위기를 맞을 때 대통령을 포함한 지배엘리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내버린다.²⁰⁾

1997년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본격화된 한국 신자유주의는 과거 개발독재 시절의 경제엘리트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그 위기를 가져온 주 원인인 경제 투명성 확보, 반부패, 재벌개혁의 변죽을 울렸으나, 곧바로 유아무야되고 말았다. 오히려 이 위기는 국내 경제엘리트들의 매개하에 외국자본이 한국의 금융과 기업을 거저 집어먹는 기회가 되었다. 그 이후 한국 경제는 여전히 공정경쟁의

20)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6 참조.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 독점의 영역과, 생존 경쟁의 논리가 과도하게 작동하는 영역으로 완전히 양극화되었다. 정작 시장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영역에는 독점이 지배하고, 오히려 보호 육성되어야 하는 영역은 과도한 경쟁과 시장주의에 노출되어 있다.²¹⁾

1948년, 분단국가로서 한국은 일본, 대만과 같이 미국의 동아시아 반공 보루의 구축을 위한 기획 속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일제 말 전시체제 하의 병영국가 요소가 해체되지 않은 채 이후 개발독재에 동원되었으며, 이러한 국가기구와 지배질서는 민주화 이후에도 해체되기는커녕 기업의 논리가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정부나 사회영역까지 지배하는 '기업사회'로 변했다.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²²⁾라는 아리기의 주장처럼 국가와 시장을 구분하는 정치경제학의 상식이 동아시아에는 맞지 않는 점도 있지만, 시장의 전횡, 자본-노동 관계의 폭력성은 유럽보다 오히려 중국이나 한국에서 더 심각하다.

결국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성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현재성을 같이 고려해서 지금의 한국을 보면, 과거의 군사독재, 더 거슬러올라가 반공 자유주의와 199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는 강한 연속성을 띤다. 한국에서 '자유'의 개념은 냉전시기의 그것, 즉 효율 지상과 성과 지상, 그리고 인간의 도구화를 의미한다. 전경련이 운영한 자유기업원이 말하는 '자유'는 과거 반공연맹, 지금의 자유총연맹의 '자유'와 거의 같은 개념이다. 이승만 정권이 주창했던 '자유'의 개념은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하였다. 즉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원산지인 미국의 것과 다르며, 개발독재형 자본 편향의 양상이나 사적 이익의 국가기구 사유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사회주의 붕괴 이후 동구권이나 남미 등 주변부 국가의 신자유주의와 유사하다. 물론 마피아 세력이 국가권력을 좌우하는 러시아·멕시코 등과 한국을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관료조직과 법원

이 재벌기업의 편에 서서 이들의 범법에 대해서는 거의 법의 칼을 들이대지 못하는 한편 국가가 기업이 고용한 용역 폭력을 방관 혹은 묵인하고, 기업 측의 살인적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점에서는 이들과 유사한 점이 있다.²³⁾

따라서 과거 한국의 병영국가와 오늘의 '기업국가'를 별개의 것으로 보는 안 된다.²⁴⁾ 군부 엘리트가 권력 권에서 탈락한 것을 제외하면 한국의 지배엘리트는 거의 교체되지 않았다. 단지 과거의 안보·성장 논리의 자리를 중북·경쟁력 논리가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과거의 국가 폭력은 일상의 폭력으로 변형·지속되고 있다. 2008년 쌍용차 농성 노동자들이 공장 지붕으로 쫓겨 올라갔을 때, 테러진압 임무를 가진 경찰이 토끼사냥 하듯이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동영상의 풍경은 1980년 5·18 당시 공수부대의 시위대 학살을 부드러운 형태로 재연한 것이다. 공권력의 감시, 법의 집행이 거의 미치지 않는 기업 현장에서 자발성의 이름을 빌린 구조적이거나 상징적인 폭력, 억압, 언어폭력과 성폭력의 일상화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늘의 한국 자본주의의 모든 문제를 신자유주의로 환원시키는 담론과 운동 노선은 한국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있다. 분단과 냉전은 식민지 체제가 다른 형태로 지속하고, 주변부성과 식민성이 온존하는 양상을 지닌다. 한국은 IMF 위기 이전부터 이미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부담, 사회투자 부분이 극히 취약한 냉전 자본주의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OECD 국가 가운데 GDP 중 사회복지 지출 비율 최하위, 고등교육에서 국가부담 최하위 등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보더라도 냉전문화와 신자유주의 문화는 공존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자라난 젊은이들만 경쟁을 내면화하고 불평등

21) 관료집단, 재벌, 공기업, 제1야당, SKY 대학은 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채 독점 지위를 향유하고 있지만, 그 외의 경제·사회 영역은 전쟁과 같은 약육강식 논리가 적용된다.

22) 지오반니 아리기,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 도서출판 길, 2009, 38~45쪽.

23) 한국도 터키와 마찬가지로 마피아 국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The Mafioso State: State-Led Market Bypassing in South Korea and Turkey", *Ingyu Oh and Recep VarcinSource: Third World Quarterly*, Vol. 23, No. 4 (Aug., 2002), pp. 711~723Published

24) 김동춘,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 - 기업사회로의 변환과 그 과제」, 앞의 책, 2006.



과 실업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 인 프라가 거의 없던 1950년대 냉전의 극성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현재의 노인층도 빈곤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 여기면서, 현재 수준의 복지는 오히려 자신이 기여한 것에 비해서는 과도하다는 성취주의와 능력주의 사고를 강하게 갖고 있다.²⁵⁾

오늘 한국이 거의 10년째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효율성과 능력주의 논리를 내면화한 상태에서 어떠한 집단 저항의 가능성과 대안도 찾지 못하는 개인화된 한국의 사회적 약자들이 노동 유연화를 오직 '해고할 수 있는 자유'로만 이해하는 기업과 소수 재벌과 거기에 고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계상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정규직들의 극히 열악한 상황, 그 질서를 받아들인 결과다.

‘굴절된 민주화’ 이후의 부드러운 ‘우익 쿠데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은 더욱 기업 국가, 기업사회로 변해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배질서는 냉전 보수주의, 유사 파시즘 체제로 더 후퇴하였다. 이 두 정부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가장 퇴영적인 형태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과도기를 보였다면, 박근혜 정부는 반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한 가운데 노골적 언론 통제, 사찰, 야당 무력화, 친 자본, 반 노동 정책을 폈다. 즉 극히 형식화된 선거정치와 정당정치는 남았지만 여타 민주주의 절차는 거의 무시되었으며, 고문과 노골적 폭력행사만 제외하면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억압적 행태를 거의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국정원, 국방부의 선거 개입, 국정원의 간첩 조작 등 사실상 헌정질서를 위배하는 행태를 구시대적 반복 경제 이데올로기로 덮어버리려 했다.

25) 선기영, 「빈곤층 복지수혜자의 복지인식 연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비정부기구학 석사학위 논문, 2013.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남북 화해, 군 문민화 작업, 수사정보기관 국내정치 개입 차단 작업은 거시적으로 보면 탈냉전, 미·중 양강 패권 체제로의 변화 시기,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의 정치지형 변동기에 반드시 요청되는 노선이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오직 정치적 반대세력이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원점으로 돌려버렸다. 그중에서도 남북 화해와 남북 경제교류 강화는 이 두 정권의 주요 지지 기반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것마저 차단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도발을 야기하여 이를 빌미로 남북한 간의 대결 정책으로 나아가 결국 중국과 일본, 미국 등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 개입 입지만 넓혀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명박·박근혜가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택한 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은 중하층, 노동자들이 경제이데올로기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남북 화해 진척, 재벌 지배구조 변화 및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충,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처, 교육 개혁 등 그 어느 하나도 국정정의로 제대로 제기하여 해결한 것이 없다. 즉 이들 두 정권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수구보수의 길로 가게 된 것은 집권 여당이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1야당 역시 정치구도 내의 독점 이익에 안주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그들의 개인적 지도력의 결핍과 정책 선택의 잘못이었다기보다는 한국의 분단반공주의 체제의 구조적 제약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고, 좁혀 보면 1987년 민주화의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945년 8·15가 한국인들에게 '해방'이 아니라 일본과 한반도의 '분리'였듯이 1987년 민주화는 '민주화'라기보다는 군부독재의 종식이었다. 군부독재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만 지탱된 것이 아니라 군부세력, 보안사와 안기부 등 공안기관, 검찰과 법원, 경찰기구, 관료조직, 우익 관변 사회단체에 의해 지탱되어왔고, 경상도 사람들의 지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노태우의 6·29선언은 최상층 권



력의 양보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것을 지탱한 구세력은 새로운 방식으로 기득권을 연장하려 했었다. 그것이 대통령 직선제와 1987년 헌법으로 집약되었다.

흔히 말하는 '87년 체제'라는 것이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 가능성, 삼권 분립, 노조 설립 자유화, 법의 지배, 언론자유, 공준을 마련한 점에서 민주주의의 길을 열기는 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건재하였고, 책임정치의 실현을 방해해온 수사정보기관이 그대로 살아남았으며, 단순다수 득표제의 대통령 선거와 소선거제에 기초한 국회의원 선거가 자리잡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생각해볼 때, 민주화의 질이나 수준도 매우 낮았다. 1987년 6월항쟁의 정치적 공간 위에서 '87년 세력'이 형성되었고, 그들이 지금까지 시민사회 운동, 제1야당과 진보정당을 통해 정치 변화를 추구해왔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이들의 힘에 의해 수립되었다.

한국의 산업화가 압축적이었던 것처럼 1987년 이후 국내외 정치·경제 변화도 압축적이었다. 가장 중요한 계기는 세계화의 물결과 1997년 외환위기 전후의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였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했지만, 그 사회적 기반인 조직 노동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연대 능력은 이미 크게 잠식된 상태였다. 이 기간 동안 과거 민주화 운동가, 사회운동 지도자들이 대거 정치권으로 흡인되었으나, 대체로 개인 입당과 수혈의 형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제도권 정치인의 일인으로 안주하게 되었고, 그들의 변신은 결국 그들을 통한 변화를 기대하던 세력들에게 실망감을 주었다. 그 결과 반공보수 헤게모니는 흔들리지 않았고, 호남이라는 거점과 대중의 불만과 반대를 표출할 다른 정치적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제1야당은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서도 야당으로 안주할 수 있었다.

물론 김대중 정부는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큰 족적을 남겼고, 노무현 정부는 탈권위주의와 과거 청산 등에서 무시하지 못할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들의 집권은 바로 1997년 경제위기, 즉 본격적

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시점과 일치하였고, 이들의 정치개혁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빛이 바랬다. 이들 정권에서 표출된 구 민주화 세력의 국가경영 실험이 강고한 반공보수와 연합한 신자유주의적인 신보수의 공세에 무너졌다. 그러나 조직노동 세력이 이들 진보적 자유주의 혹은 구민주화 세력을 압도할 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아무런 헤게모니 없이도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한국의 '87년 체제'는 사실상 끝났다. 이것은 민주화 담론이 더 이상 국가개혁의 대안을 담을 수 없으며, 1987년 민주화를 주도한 세력이 국가나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력을 거의 상실했다는 의미다. 조직노동운동의 보수화, 체제내화, 시민운동의 제도화, 보수야당의 무력화와 진보정당의 사실상의 존재감 상실은 그것의 현상적 표현이다.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가 단순한 사고로 마무리될 수도 있었으나, 대참사가 되고 큰 사건으로 발전한 이유도 하나의 재난사고조차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회·정당의 총체적 무능력과 직무유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의 모든 경제사회적 위기는 단순히 정권 교체만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국가와 사회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청하는 이유다.

'사회건설'과 '정치, 국가 재구축'을 위한 대안 - '사회국가' 수립의 필요성

노무현 정부 수립 전후인 2000년대 초반 한국은 근본적인 체제 전환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 전환은 이중적인 차원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개발독재 시절의 경제성장→평생 고용→교육을 통한 지위 상승→결혼과 가족복지→퇴직금·연금을 통한 노후 보장으로 집약되는 그간의 한국의 사회경제 메커니즘이 저성장→불완전 고용→교육의 계층상승 기능 중단→결혼 불능과 가족복지 붕괴 시대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53년 체제'라 부를 수 있는 분단·반공, 북한적대와 안보지상주의의→흡수통일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그 이유는 탈



냉전과 미국의 전략변화→지구적인 패권구도의 균열, 중국의 부흥과 일본의 보수화→남북 화해, 평화통일 요청→동북아 새 평화질서 및 민간 안보의 시대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를 '구시대의 막내'라고 본 것은 정확했다. 그렇다면 그의 임기 중에 이미 여야, 시민사회 모든 면에서 새로운 지도력이 구축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퇴행으로 10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했으며, 제1야당의 정치적 지도력도 거의 없다. 특히 현재의 박근혜 정권은 거의 통치불능 상황에 빠졌으며, 대통령 눈치만 보는 집권 여당은 의미 있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이나 비전도 없고, 제1야당 역시 대안세력으로 부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 교착, 사회 교착이 지속되고 있다.²⁶⁾

현재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주변부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양극화와 불평등, 기업의 투자 부진과 경제 침체, 소비 저하 등 극심한 위기상태에 있다. 정치적으로는 핵심 국가기관의 헌정 문란, 정치 부패, 언론의 신뢰 상실, 준파시즘적 사회집단의 발호,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조롱 등에서 보인 정의 상실, 도덕 해체 현상 등이 노골화된 상태에 있다. 거시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이 거쳐왔던 식민지 근대화, 돌진적인 개발독재, 성장주의와 서구 따라가기에 몰두해온 근대화 과정의 모든 모순이 거의 한꺼번에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터져나왔다.

그래서 오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길게는 한 세기, 짧게 잡아도 적어도 30,4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정치사회 개혁을 필요로 한다. 물론 동아시아형 주변부 신자유주의 한국은 단순히 신자유주의 질서 일반을 극복하는 과제와 더불어 식민지, 냉전을 거치느라 제대로 풀을 갖추지 못했던 근대 주권국가를 제대로 세우는 작업을 포함한다. 그것은 한반도의 전쟁/분단체제의 극복, 즉 남북한 화해 및 통일과 연동되어 있다. 물론 정당지지율을 반영하지 않는 국회의 의석배분 구조를 개혁하는

26) 김동춘, 「통치 불능의 정후는 완연한데」, 다산연구소, 2014, 7. 30.

등의 정치개혁과 선거 정치를 거치지 않고 대중 투쟁만으로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교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치개혁과 선거 승리만으로는 결코 정치와 사회를 바꿀 수 없다. 선거와 정당정치 혁신은 정치사회 개혁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정치 위의 정치, 즉 사회권력의 분배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겪었던 정책 실패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 한국의 '기업사회'에서는 기업 권력이 정치권력 위에 있다. 그래서 기업권력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정치권력을 교체하더라도 그 정권은 정부 위의 '그림자 정부'에 의해 포획될 것이다. 미국의 대법원이 그렇듯이 한국도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농단하는 사법의 정치화가 과도하게 진행된 상태다. 정당정치가 사회갈등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대기업, 대형 로펌, 사법부가 정당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

'동아시아형 주변부 신자유주의 국가'인 한국은 일본, 대만 등과 같이 정치 민주화 즉 정당의 사회적 대표성 확보, 나아가 1945년 이후 임시적이고 불구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국가를 다시 수립하는 과제를 추진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관료·정치권의 유착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공공 역량강화, 그것에 기초한 대안적 정당의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즉 책임있는 대안 정당의 건설, 사회 재구조화, 국가 건설 모두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 재구조화, 정치변혁을 포함한 국가의 건설을 지향해야 한다.

조선왕조 붕괴 이후 식민지 근대화의 길을 걸은 이후 한반도에서는 '민족'이라는 가치는 매우 중요한 관념과 실천으로 존재했지만, '사회'가 제대로 구축되고 실천된 적은 없다. 분단국가의 수립으로 '국민 주권'의 원칙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했다. 근대 한국에서 지역사회, 직업집단, 노동조합, 대중의 행동 등으로 요약되는 '사회'는 주로 저항운동 속에서 존재해왔다. 도덕 문화적 차원에서 보면 사회는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신뢰의 형성,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의 감정 공동체로 존재한다. 사회가 존재하려면 악행은 처벌을 통해 억제되고, 처벌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고



칭찬할 만한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²⁷⁾ 그런데 한국에서는 처벌과 포상의 원칙이 제대로 집행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트들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방식으로 권력을 잡았고, 대중들은 불법을 저질러야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래서 법에 대한 복종이나 질서유지는 자발성에 기초를 두지 못했다. 가족·친족·동문·고향 사람들의 1차 집단은 존재했지만, 국가와는 별개의 공적 영역으로서 사회, 그리고 국가를 넘어서는 동아시아와 세계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상상력이 미디어나 지식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사회’란 공공성을 의미한다. 공공성은 사회의 다수자, 즉 약자와 빈곤층을 포함한 중간층 이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을 의미한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관료기구가 시민적 감시와 통제 위에서 활동하는 것, 정당이 사회적 대표성을 갖는 것, 재판이나 검찰의 기소가 권력자의 입김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적 개입 속에서 진행되는 것, 기업과 노조가 이익 추구를 기본으로 하더라도 더불어 사회적 요구를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 언론이 기업의 이해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요구나 의사를 대변하는 것, 대학이 공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 지방정부나 지역사회가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 전문가들이 직업집단의 윤리기준 위에서 행동하도록 직업집단이 조직화되는 것, 자발적 결사체가 자유롭게 조직되어 공적인 마인드를 갖고서 이익을 표출하는 것, 일반 시민들이 가족 외의 지역사회나 직업사회의 성원으로 행동하고 기여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사회건설, 정당건설, 그리고 국가건설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면 현재 한국에서 수립되어야 할 국가는 19,20세기형 근대국가가 아니라, 21세기형 ‘사회국가’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제헌헌법에도 ‘민주적 사회주의’ 혹은 경제사회적 민주주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국가의 지향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행 헌법에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있는

27)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 비봉, 2009, 144쪽.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포함하여, 제119조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경제 민주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회국가의 요소가 있다. 그러나 헌법이 그저 명목적인 규범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하위법이 그것에 부합해야 하고, 입법부의 의석 구성, 관료집단의 정책 지향, 법원의 지향이 그에 부합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국가에서는 국가가 공공성, 사회적 유대의 실현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그것은 국가가 정의의 원칙에 서서 시장의 통제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재벌 개혁이 관건이다. 기업의 활동은 근대사회 형성의 기반이기도 하지만, 규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를 파괴하기도 한다. 그래서 폴라니Polanyi가 말했듯이 시장·경제활동 영역은 사회(활동)의 일부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시장규제 사회는 국가의 행동을 통해 구체화되지만, 국가를 넘어서는 것, 초국적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일 과거사 문제는 한·일 국가 엘리트의 야합으로 봉인되었으나 여전히 국가 엘리트들은 국민통합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만이 국가 엘리트의 야합을 폭로하고 진정한 연대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국가, 혹은 정치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한국의 분단·전쟁 상황, 그리고 동아시아 정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남한만의 사회국가 건설은 어렵다. 그래서 평화·통일의 지향과 사회국가의 건설은 반드시 결합되어 있다. 특히 한국은 국토가 좁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에서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회 내의 분업과 전문화의 정도도 지연될 수밖에 없고, 결국 거대 시장권을 가진 주변 강국에 의존하기 쉽다. 남북통일이 되거나 남북 화해가 이루어지면 경제사회 정책 형성에서 군사정치 변수의 제약을 줄일 수 있고, 시장 규모도 확대되어 사회 및 국가의 운신 폭을 넓힐 수 있다.



맺음말 : '사회국가' 수립을 위한 주체 형성

사회국가의 건설을 위해서는 그것을 담당할 주체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의지를 갖는 정치세력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정권을 장악해서 입법을 통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정권이 들어서도록 하는 것, 정권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역시 사회적 주체 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서로 맞물려 있다. 그래서 사회적 주체 형성과 정치 주체 형성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미디어가 정당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현대 한국의 거대 미디어는 수용자보다는 광고주에 더 크게 종속되어 있으니 준정당인 미디어는 광고주인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대안적 미디어는 대안 정당 건설의 전제이자 그 자체이기도 하다. 물론 21세기 단일 계급이나 사회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계속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또 현재와 같은 정당이 새 세대를 끌어 들일 수 있을지, 사회 변화의 그릇이 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입법과 사법을 국가가 허용한 정당과 사법부가 독점해야 한다는 것도 20세기의 유산일지 모른다. 그래서 시민입법, 시민사법의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정당 건설과 사회적 주체 형성은 함께 가야 한다.

사회국가를 위한 주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장·단기의 과제를 생각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은 신자유주의의 최대 피해자들은 청년 노동자들과 실업자들이다. 이들 대다수는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신화를 받들기 때문에 매우 개인주의화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최근 홍콩 청년들의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일자리, 주거권, 결혼과 출산의 권리 확보를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서비스 분야에 불완전하게 고용된 청년들이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 특히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화되어 새로운 사회적·정치적 주체로 등

장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제조직들은 사회적 역할에 좀더 비중을 두는 단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노조와 협동조합의 결합,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대학과 지역시민단체의 시민정치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실천될 수 있다. 노조는 협동조합 결성에 적극 나서서 빈민, 자영업자, 농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지역에 거의 기반을 두지 않는 한국의 기업별 노조들은 ILO가 권고하는 것처럼 지역사회 사회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지역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기 위해 협동조합 결성 작업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생활세계를 시장화, 식민화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 지역금융 등 새로운 금융체제가 모색되어야 한다. 노조나 협동조합은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해야 하며, 모든 노조 조합원들이 적어도 하나의 사회단체, 하나의 협동조합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조직 차원의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

각 정치사회 단위는 청소년을 위한 시민교육, 특히 노동·평화·인권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시민교육 기관을 활성화하고 사회교육을 통한 여성 의식화, 주민 의식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교를 벗어나 지역사회의 탈학교 청소년, 학부모 교육에 부분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은 평생교육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서 사실상 영국의 개방대학, 현재의 방송대학이 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중앙집권국가의 전통을 가진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지식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지식인의 역할이 없으면 개혁의 방향이 상실되고 곧 나라도 지탱될 수 없다. 그런데 완전히 기업조직처럼 운영되는 지금의 한국 대학은 그런 지식인을 만들어낼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정당이 자체의 정치 엘리트 양성, 사회적 의제와 담론 형성 기능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현재 시점에서

는 대학 밖의 연구공간이 활성화되어 사회적 담론과 비전을 결집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주체 형성은 사회적 비전이 있어야 가능하다. 비전은 인간성의 실현과 인간의 잠재력을 억압하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상상력 속에서 나올 것이다. ㉠

金東春. 『황해문화』 편집자문위원,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1959년생. 서울대학교 사범대 졸업, 동 대학원 사회학 박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역사비평』, 『경제와사회』 편집위원 역임. 주요 저서 『1960년대의 사회운동』, 『한국사회노동자연구』, 『한국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분단과 한국사회』,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 『전쟁과 사회』 등. dckim@skhu.ac.kr